

[종합·해설]

정치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

“순회 공청회 거쳐 연내 입법 완료”

시·군·구 통합 고효율 구조 재편 추진

오늘 국회서 여야 3당 참석 종합 토론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점차 끝나고 있다.

지난 25일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5번째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서 구상하는 개편안이 대부분 윤과를 드리웠다. 여기에 여·야 3당 등 정치권이 가세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가동 중인데다 정부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가시화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지역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회망제작소와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태열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3당 간사인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오제세,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명수 의원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해 정치권은 물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우선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허태열, 권경석, 우윤근 의원의 법안은 큰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두고, 인구·면적·경제·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인접 시·군·구를 통합, 50~70개의 통합

자치단체를 만드는 게 공통점이다.

그러나 권경석, 우윤근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하고 국가 위임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등을 수행하는 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반면, 허태열 의원은 시·군·구 통합이 3분의 2 이뤄진 이후 ‘도’의 기능과 지위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기준 의원은 시·군·구 통합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광역시를 도로 통합, 전국을 8개 가량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접·시도간을 통합하되 ‘강소국연방제’라는 자유선진당의 대안을 법안에 담았다. 인접 시·도를 통합,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나눔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자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은 “지역순회 공청회를 비롯해 본격적인 논의절차를 거쳐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저비용, 고효율 구조 개편 필요=현행 광역, 기초 자치단체를 축으로 다시 3단계(시·군·구) 또는 3단계(도·시·군·구)의 다층구조로 이뤄진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시대변화에 걸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행정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체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쟁점

	주요 의견	쟁점
시·군·구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230개 시·군·구를 60~70개로 통합 인구 50만~700만 명 기준(17개 행정체제개편특위안) 자유선진당은 ‘강소국연방제’ 도입시 전국을 120~200개로 개편할 것을 주장(이명수 의원) 	20만명 정도인 현행 시·군·구 모를 늘릴 경우 주민 자체 훼손 우려
도 폐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권적인 도 폐지(허태열 한나라당, 우윤근 민주당 의원) 현행 도를 유지하되 국가 사무처리를 하도록 기능을 전환(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전국을 인구 500만~1000만명의 6~7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국방과 외교 기능 수행(이명수 의원) 	정치권의 빅뱅, 통합 시·군·구가 2/3 이상일 때 해당 도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제시됨
선거구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통합에 맞춰 2명 이상의 의원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통합 후에도 당분간 선거구제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 통합시 갑, 병·식으로 선거구 이름만 바꿔 	선거구 확정 문제 끼어들어온 선거법 개정 필요
통합 철자	시·군·구 1/30 이상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통합 추진 위원회 설치(노영민 민주당 의원 등)	지방의회에서 통합 부결시 주민투표를 인정할 것인가 행정

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18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먼저 추진한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특위구성을 요구하며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현행 지방행정

체제를 70여개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이는 한나라당의 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도 폐지, 시·군·구의 60~70여개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윤영기·박정숙기자 penfoot@

“행정체제 개편 차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허태열 개편특위 위원장**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9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차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특히 “시·군·구를 통합한다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구제와 결부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내에 입법한다고 해도 6개월간의 주민투표 등을 감안,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는 현행 체제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특히 “시·군·구를 통합한다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구제와 결부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제2연평해전 7주년기념식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7주년기념식에서 당시 승조원들이 희생자 위령탑에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교육 주범’ 내신제 근원적 개혁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현행 초중고 내신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벌여 연말까지 ‘내신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음에 따라 내신을 둘러싼 논쟁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전망이다.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최근 여권이 제시하는 사교육 대책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공교육 개혁을 위한 내신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 교육을 바꾸려면 내신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 논의의

폭이 워낙 크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추진 과정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내신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준차가 다양한 학생들을 똑같은 시험지로 획일적 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획일적인 내신제도가 자리잡게 된 데에는 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신이 대입 전형 요소의 일부로 종속돼 있다 보니 학생들을 쉽게 서열화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 최근 여당이 사

교육 질감을 위한 긴급 대책의 핵심 방안으로 내신 절대평가 전환 및 내신비중 축소안을 들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 내신이 사교육의 가장 큰 주범이 되고 있다는 판단도 내신제도 개선 논의의 큰 배경 중 하나다. 수능은 시험의 특성상 사교육으로 쉽게 점수를 올리지 못하는 반면, 단순 암기 위주의 과거 학력고사 스타일을 유지하는 학교 시험은 사교육의 힘을 빌리기 비교적 수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교원 58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사교육 경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내신 절대평가 전환 및 내신 반영비율 축소’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37.6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단지 내신을 악화하는 것만으로는 사교육을 잡을 수 없으며 오히려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내신 신뢰도 저하 문제, 이로 인한 대입에서의 내신 무력화 가능성 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연합뉴스

교과부 연말까지 ‘선진화 방안’ 절대평가 전환 일 듯

李 대통령 대운하 백지화·민생 사법 사면 선언 왜 나왔나

‘소통·통합정치’ 본격 시동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 포기와 민생 사법의 특별 사면 등을 추진하는 등 소통과 통합에 방점을 둔 국정 운영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 이념·지역·계층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근원적 차방’의 맥그림으로 읽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임기 중에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겸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치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던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 배경은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국력이 낭비되는 점을 더 이상은 방지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신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지금도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대운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꼭 추진해야 하는 ‘4대강 살리기’ 마지막 대운하와 연계해 정쟁 도구화하는 양상인 만큼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사법의 특별 사면을 추진키로 한 점도 역시 민생 행정을 통해 국민 통합을 구현한다는 차원이다.

특사 시기는 광복절인 8월 15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상으로 ‘생계형 운전자’만 언급됐지

만 일반사면이 아닌 특사인 점을 감안할 때 민생 사법 전체로 그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도록 원칙을 지키되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생계형 사법이 특사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여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8·15 대사면설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과 관련, 결국 이 대통령의 ‘근원적 차방’ 구상이 광복 절에 맞춰 전모를 드러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7월 초·중순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전에 1단계 체방전을 발표하고, 순방 후 2단계를 내놓은 뒤 광복절에 마지막 3단계 방안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달청 12건 입찰공고

‘4대강 살리기’ 첫 공사 발주

최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의한 공사 발주가 시작됐다.

조달청은 서울·부산·대전·의정부·경기·인천·광주·전남·제주 6곳에 12건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9일 터너(일괄 입찰) 방식의 입찰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다. 이는 국토관리청(32건), 자체체계(54건), 수자원공사(3건), 농어촌공사(96건) 등이 각각 시행하는 총 185건 22조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의한 첫 공사 발주다.

조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돋기 위해 기

회재정부가 이 날짜로 개정한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및 고시 내용을 이번 단기 입찰공고부터 적용했다.

조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녹색건설, 예산낭비 방지, 원활한 사업 수행 등 3가지 원칙을 반영키로 했다.

사업내용은 자연형 하천정비, 생태·문화·예술공간 등 친수공간 조성, 자전거도로, 수증보, 소수력발전소 등으로 총 예산은 3조3천억원 규모다.

조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돋기 위해 기

C와 하나되다
As one, The new C-Class

Mercedes-Benz